



주간통일정세 2008-27(2008.06.30~07.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자강도 자연보호구 등 시찰(7/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화평군에 있는 오가산 자연보호구와 화평군민발전소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자로 보도
- 김 위원장은 오가산 자연보호구에서 천연기념물 등을 둘러보며 자연보호구 보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잘하기 위해 “조림계획을 바로 세우고 나무에 대한 비배(재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이어 화평군이 자체 건설한 화평군민발전소의 내외부를 돌아보고 “군은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이라며 “화평군의 경험은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옹계 이용한다면 군 자체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민생활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美 식량지원은 김정일 ‘전승품’ 선전(7/6, 연합; 제160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승품’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6일 보도, ‘오늘의 북한 소식’ 제160호에서 평양시의 한 간부 말을 인용,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식량지원 등은 “봉쇄에는 자력갱생, 전쟁도발 위협에는 전시 준비상태로 강경하게 맞서 싸워온” 김 위원장의 “전략적 방침의 승리라고 도처에서 선전하면서 미국의 지원은 전승품이라고 강연하고 있다”고 설명

● 위커 前사령관 동상 건립추진 비난(7/5,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6.25전쟁 중 숨진 월턴 위커 초대 유엔 지상총사령관의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 “미제에 의해 원한 품고 쓰러진 수백만 우리 동포형제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못할 친미 매국행위”라고 비난



● **조평통, 南정부 대북정책 비난(7/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상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5일 상보를 발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책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룩한 성과들이 짓밟히고 북남관계가 얼어붙고 있다”고 주장
- 조평통은 상보에서 현정부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방침에 대해 “무지”라고 주장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조(북)·미 사이에 논의할 문제이고 또 현재 그것을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 조평통 서기국은 6·15공동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통한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간 열차 운행, 이산가족 면회소 준공식, 백두산 관광사업 등 성과를 소개하면서 “역적패당의 북남관계 단절책동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진행하게 되었던 제2차 북남총리회담과 부총리급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비롯한 20여건의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이 모두 파탄됐다”고 지적
- 또 이명박 정부가 “당국 사이에 합의된 북남협력사업도 모조리 잘라냈다”며 이로 인해 철도·도로 개보수와 올림픽 공동응원단 파견 등이 무산됐고 “지난 3월초에는 남조선의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측의 현지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측이 군사적으로 참여한 동해안 육로와 해안선 통과까지 허용하는 성의를 보였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

● **北, 6·15, 10·4선언은 7·4성명 계승(7/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우리민족끼리)**

- 북한 언론매체들은 4일 7·4남북공동성명 채택 36주년을 맞아 이 성명 채택을 고 김일성 주석의 ‘영도’에 의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6·15공동선언 및 10·4남북정상선언과 연결시킴.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중시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음.
- 조선중앙통신은 ‘불멸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담았으며, 이 3대 원칙엔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사상과 방침, 조국통일 영도 업적이 집대성”돼 있다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은 ‘조국통일의 역사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날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 당국이 1972년 5월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2개월 뒤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7·4공동성명을 발표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
-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냈다”고 방송은 말하고 김일성의 ‘통일유훈’을 김 위원장이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김 위원장의 통일정책이 김일성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침.



- **강성대국 건설 전망 강조(7/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일 “강성대국의 설계도는 혁명의 수뇌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을 거듭 강조
 - 매체는 ‘강성대국 건설의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비범한 영도력은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라며 김 위원장을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고 치켜세움. 북한에서 “혁명의 수뇌부”는 김 위원장을 가리킴.
 - 또 “강성대국 건설은 영도자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친 천만 군민(軍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거듭 강조

- **미국의 “종교침투” 경계(2008년 5월호, 천리마)**
 - ‘천리마’는 “조금이라도 미제의 종교침투 책동을 허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주정신이 흐려지고 신념이 흔들리게 되며 종당에는 삶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제도도, 삶의 터전인 나라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고 주장, 천리마 5월호는 ‘무엇을 노린 종교선전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의 악랄한 심리모략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집요한 종교침투 책동”이라며 “미제는 종교적 침투를 통해 인민들의 자주적 신념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놓으려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돈 벌려고 中 산업쓰레기 처리(7/3,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997년 대만에서 핵 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려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 처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북한은 중국어 웹사이트에 올린 광고에서,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의 산업쓰레기를 북한에 보낼 업체를 찾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북한은 또 폐기된 자동차 배터리와 선박, 폐지를 팔 업자를 찾고 있으며, 원하는 수량은 200t 이상이고 도착항은 남포항이 될 것이라고 광고에서 밝힘. 광고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소재한 한 업체를 대리상으로 한다고 아울러 밝혔으며 이 광고는 지난 2월 13일 처음 웹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짐.

- **埃오라스콧, 대북 시멘트사업 투자 중단(7/2, 자유아시아방송)**
 - 2007년 북한의 시멘트 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이집트의 오라스콧 회사가 5개월 전부터 이 투자를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한편 최근 평양 류경호텔의 공사 재개와 관련, 오라스콧이 이에 투자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라스콤측은 회사 차원에서 무관한 일이라며 “아마 경영진이나 그 가족중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北상반기 경제 계획 초과 달성(7/3, 평양방송)

- 북한은 올해 상반기 ‘인민 소비품’ 생산과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해 달성했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 평양방송은 “연초부터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면서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 비단, 방직기계, 일용공업관리국에서 각각 계획대비 117%, 116%, 105%, 104% 등을 기록했다고 보도
- 방송은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함흥영예군인(상이군인) 수지일용품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 “생산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계획보다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했다”고 주장
- 또 전력은 105.9%, 석탄은 광산별로 101.7~107.2%, 철도 수송은 100.3%, 자동차 수송은 112.2%, 수출입 화물선 수송은 109.1%, 국내 화물선 수송은 112.1%, 무역항 통과량은 106.1% 등의 초과달성 기록을 세웠다고 방송은 보도

● 北, 1인 하루 배급량 150g 불과(7/3,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이 본래 1인당 하루 600g이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줄어들어 현재는 단지 150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6월 11일부터 식량실태 조사를 벌인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로 구성된 유엔 실사단은 “동북부 도시 지역에서 기근 초기 징후들이 발견됐다”는 예비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北, 재활용 철재로 남포 화물부두 건설(6/25, 민주조선)

- 북한은 철강재를 재활용해 남포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완공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남포항만건설관리소의 리응철 지배인은 민주조선 기고문에서 화물부두 장소를 정한 뒤 수차례의 설계 합평회와 심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했지만 “우리 앞에는 엄청나게 요구되는 자재를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나섰다”고 회고하고 “막대한 양의 자재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술”을 고심한 끝에 “이미 폐기돼 버린 주변의 낡은 공장터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양의 철강재를 회수해 선별, 이용하고 여러 곳에 사장돼 있는 철강재를 동원, 이용”하여 완성했다고 밝힘.



라. 군사 관련

● 北조평통, 제2연평해전 기념식 비난(7/3, 조평통서기국)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3일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을 “반공화국 광란극”이자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를 통해 기념식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높아가는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 기운을 억누르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고취하며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며 용납못할 반통일 범죄행위”라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모범 근로자’ 평양견학(7/5, 조선신보)

- 북한의 각 지방에서 선발된 ‘모범’ 근로자들이 1일부터 평양견학을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신문은 평양견학은 해마다 진행되는데, 이번 견학에는 지방의 공장·탄광·광산에서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근로자와 모내기에서 모범적인 농장원, 어로공(어부), 유별공(뗏목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보도
- 이들은 7일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역사박물관, 건축물, 교예극장, 유희장 등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게 됨.
 - * 북한에서는 지방 주민이 평양을 방문하려면 인민보안성 등 관계기관의 엄격한 검토후를 거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평양 견학이 큰 자랑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음.

● 매년 새 디자인 아동복 80여종 생산(7/5,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아동복공장인 평양어린이옷공장에서는 종업원 모두가 디자인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마다 80여개 형태의 새 옷을 생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최근 시기 이 공장의 어린이옷들은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며 “공장의 직장, 작업반, 재단반, 주문반, 준비실들에 소속된 종업원 모두가 어린이옷 형태 도안(디자인)을 창작해 제품품평회에 제출”한 결과라고 소개
- 제품품평회는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매달 한번 개최하고 품평회에서 합격한 디자인은 대량생산에 들어가며, 디자인을 제출한 종업원은 과학기술시상금을 받음.

● 北 여름 보양식 ‘단고기’와 ‘자라요리’(7/5, 조선신보)

- 북한에서 ‘단고기’(보신탕)와 ‘자라요리’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방북하는 재일동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신문은 먼저 남한에도 꽤 알려져 있는 평양시 통일거리의 ‘평양단고기집’을 들어 “옥류관이 평양냉면의 원종장(원조)이라면 평양단고기집은



단고기 요리의 원종장으로 일러진다”고 소개하면서 “이곳 식당은 지금까지 70여가지 단고기 요리를 개발했다”고 보도, 신문은 손님들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철에 가장 많이 찾고 있으며 하루에만도 2천명가량이 찾고 있다고 소개

- 조선신보는 단고기와 함께 주목받는 보양식으로 평양시 보통강변의 보통강전시장 3층에 있는 식당이 2005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자라요리도 꼽음. 특히 ‘자라 일식요리’는 살아있는 자라 한 마리를 요리해 코스요리로 내놓고 있는데 4명이 “푸짐히” 먹을 수 있다고 설명

● 北 일부 100mm 강수…장마 본격 시작(7/4, 연합)

- 지난 2일 새벽부터 3일 낮까지 일부 지역에 100mm를 웃도는 비가 쏟아지는 등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고 류기렬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장이 4일 발표

● 北학생들, 국제러시아어경연 제패(7/4, 조선중앙통신)

-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외국어학원 학생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2차 국제학생 러시아어 올림픽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경연 과정에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자기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실감있게 이야기함으로써 높은 정신세계와 어학실력을 보여줬다”고 강조

● 北, 中 올림픽 11개종목 63명 출전(7/4, 조선신보)

- 북한이 내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29회 올림픽경기대회에 모두 11개 종목 63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10대 바둑고수 바람(7/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월 24~30일 평양 청춘거리 ‘태권도전당’에서 열린 제11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바둑경기가 “신진선수들의 대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도
- * 북한은 최근 유치원부터 바둑을 통한 지능교육을 강조해온 결과 10대, 20대 유망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신문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5~26세 바둑선수 130명이 출전, 지난해 75명에 비해 크게 증가

● 北, 對南 접촉자 조사…南물품 단속(7/6, 연합; 제160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남측과 접촉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한국산 차량, 상품 등 물품을 단속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4일 주장,



소식지 160호에서 “평양에서는 요즘 ‘10·2(10월2일) 검열 그루빠(그룹)’들이 구역마다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 사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열 그루빠는 컴퓨터와 녹화기 등이 있는 집들에서 한국산 씨디(CD)가 있는지 주로 검열한다”고 설명하고 “컴퓨터는 본체를 들고 가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 한국관련 영상물이나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또 “평양시는 지난달 초순 한국산 차량이 시내에 다니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한국산 차량은 한대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며 보이는 족족 몰수하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이때문에 “한국산 차량을 운행해 오던 특수 기관, 기업소나 단체 등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상습 홍수피해 北, 장마 대책에 총력(7/2, 조선중앙통신)
- 조선신보, 남북 월드컵본선 동반진출이 이상적이라고 기대(7/2, 조선신보)
 - 남북한이 나란히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B조에 포함된 데 대해 조선신보는 2일 “이왕이면 3단계(3차) 예선 때처럼 북남이 당당히 1, 2위를 차지하면 이상적”이라고 기대, 신문은 ‘본선의 대문’이라는 단평에서 “본선 동반 진출을 위해서는 북과 남이 다른 조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
- 새단장 대동문영화관 ‘나들이 명소’(7/2, 조선신보)
 -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대동문영화관이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평양시 중구역 승리거리에 있는 53년 전통의 이 영화관은 최근 완료된 현대화 사업으로 연 건축면적이 배로 늘었고 1층에 2개의 관람홀과 도서판매대를, 2층에 사진 전시홀, 영사실, 컴퓨터 조종실 등을, 3층에 미술작품 전시홀을 갖췄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6월 초 대동문영화관을 방문했으며 6월 12일 개축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석
- 평양은 지금 ‘공사중’(6/30, 연합)
 -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시작된 ‘평양시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에 맞춰 2007년 연말부터 ‘국제도시화 계획’을 추진, 현재 상업거리 조성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02년 1월 시작된 평양시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동강변 미화, 주택 리모델링, 주요시설 조명 교체, 도시 인프라 정비 사업 등이 진행



● 북한에 ‘개인 소상공업’ 확산(6/30, 연합)

-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수공업, 무역업 등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03년 3월 북한당국의 ‘시장 장려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1~8명 미만의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늘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북핵 6자회담 11~12일째 개막 예정(7/6, 연합)

-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핵 수석대표회담이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7~9일)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 후반에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며 “의장국인 중국이 참가국들의 의견을 조율해 7일째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
- 당초 중국은 6자 수석대표회담을 10일 개최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에서 G8 일정을 감안해 하루 이틀 정도 늦춰 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일이나 12일째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
-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을 기다리며 2007년 10월 초 제6차 2단계 회의 이후 9개월여 간 열리지 않았음. 북한은 6월 26일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였음.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 주로 협의하고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과 3단계 핵폐기 일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
- 6자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9일이나 10일째 베이징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北, 6자 의무이행 완결돼야 다음단계 논의(7/4, 외무성대변인)

- 외무성 대변인은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답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



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며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냉각탑을 폭파해버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상기시킴.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

나. 북·미 관계

- **北, 북미관계 변화…평화협정 체결해야(2008.7월호, 금수강산; 7/4, 내나라)**
 - ‘금수강산’ 최근호(2008.7)가 북미관계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4일 ‘내나라’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조(북)미 사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외교인원북무국 대표단 방북(7/4, 조선중앙통신)**
 -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인원북무국대표단(단장 전홍산 국장)이 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시진핑, 訪北때 항공유5천t과 1억위안 제공(7/4, 연합)**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 선물로 북한에 항공유 5천t과 인민폐 1억위안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언급했으며 북한에 대한 원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상무부에서도 4일 현재까지 대북식량원조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북·일 관계

- **재일본 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방북(7/4, 조선중앙통신)**
- **조선신보, 日의 대북정책 변화 기대(7/1, 조선신보)**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 이후, 일본 “국민 사이에서 그(해제) 이전에 일본이 현안을 풀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가 대조선(북한) 협상에 보다 능동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일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일 주장

- 신문은 ‘피할 수 없는 아베식 납치외교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 “납치문제에 관한 논의는 있어도 조선과의 대화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신문은 또 핵신고서에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을 “생트집을 잡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실험 후 재개된 6자회담에선 “우선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계획 포기과 이에 상응한 미국의 행동조치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각측의 양해사항”이었으므로 “현 단계의 핵신고에 핵무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

마. 기타외교 관계

● 北대표단, 차베스 대통령 면담(7/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형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7월 3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5일 보도, 방송은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제7차 비동맹국 공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와 조선(북한)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는 좋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1974년 10월 수교하고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2002년 3월 박동춘 쿠바주재 북한 대사가 베네수엘라 주재 북한대사 겸임 발령을 받았으며 2006년 4월에는 로시오 곤살레스 대사가 북한에 부임

● 北리찬호 나이지리아대사, 가나대사 겸임(7/3, 평양방송)

- 리찬호 가나주재 대사가 6월 25일 존 쿠푸오르 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평양방송이 3일 보도, 리 대사는 2007년 9월부터 나이지리아 대사도 맡고 있음.

● 北인민보안상, 라오스 국가주석 면담(7/1, 조선중앙통신)

- 라오스를 방문 중인 북한의 주상성 인민보안상이 6월 28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인민보안성 대표단은 6월 24일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으며 베트남에서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을 면담한 후



27일부터 라오스를 방문 중임.

● **北-라오스, 법률협조조약 체결(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라오스가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협조조약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이날 조인식에서는 라오스를 방문중인 북한 운명국 중앙재판소 제1부소장과 켓 키엣티삭 라오스 법무부 차관이 각각 서명했으며, 라오스측에서는 법무장관, 최고인민재판소 소장, 최고인민검찰소 소장 등 사법·검찰부문 수뇌들이 대거 참석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 가동(7/5, 연합)**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온라인 출입신청시스템'을 구축,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발표
- 관리위는 앞서 6월 한달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7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이 시스템을 통일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

● **금강산 소방서 8일 오픈(7/4, 연합)**

- 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금강산 소방안전대책의 하나로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옆에 소방서를 설치키로 하고 2007년 9월 공사에 들어가 8일 준공, 연면적 89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금강산 소방서'에는 사무실과 차고, 구급대기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등 소방차 3대와 소방장비를 갖추게 됨.
- 소방서에는 전직 소방대 출신의 대원 8명과 소방대장 등 9명이 근무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 **金통일 정부, 남북관계 발전 의지 확고(7/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정부, 민간 대북정책사업 43억원 지원 의결(7/3, 연합)**

-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하중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올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지원 대상 사업과 금액은 결핵관리 사업에 10억원, 의료인력 교육사업 10억8천500만원,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 12억5천만원 등 4개 사업에 43억3천500만원임.

● IOC, 남·북에 北京올림픽 공동입장 요청(7/1, 연합)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남·북 올림픽위원회에 각각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을 요청한 것으로 1일 파악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우리 측에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요청해왔다”면서 “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공동입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북측 올림픽 위원회와 접촉, 이런 의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

● 北, 남측 옥수수 5만t 거부(6/30, 통일부)

- 정부는 6월달 제안한 대북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한 북측 입장을 최근 재차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30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북측 실무자는 ‘안 받겠다’고 답했다”고 전달
-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옥수수 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전통문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

● 개성공단 한 업체, 北직장장과 마찰…장기휴업(6/30, 연합)

- 북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북측 직장장 및 관리 당국과의 갈등 속에 20일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됨.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6월 7일 공단 입주업체 B사 직원과 B사의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이 소모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남·북측 관계자들 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B사는 남측 직원이 폭행당했다면서 북측의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직장장 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일부터 임시휴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日관방장관 “6자회담 금주내 재개될 듯”(7/6)**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7일부터 9일까지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끝난 뒤 주중에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 마치무라 장관은 5일 G8 정상회의의 프레스센터 개관식에 참석, 기자들에게 “정상회의가 끝난 뒤 그렇게 머지않은 시일내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 베이징(北京)에서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북핵 6자수석대표회담 11·12일께 베이징 개최” <美관리>(7/6)**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인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미 백악관 관리가 5일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 와일더 보좌관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는 11·12일께 베이징에서 6자회담 참가국의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북핵 신고내역 검증방안과 북핵시설 해체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北 플루토늄 검증뒤 핵무기 포기 준비여부 판단”(7/5)**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4일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검증한 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의 ‘주디 우드러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미국)는 북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신고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방침을 거듭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 **파키스탄 ‘北에 원심분리기 제공설’ 일축(7/5)**

-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장비인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는 A.Q.칸 박사의 주장에 대해 파키스탄 외교부는 5일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모하메드 사디크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핵 확산 문제는 종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음.

-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대변인인 라시드 쿠레시도 칸 박사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일축했음.

● “北, 2000년에 파키스탄서 원심분리기 제공받아” <칸박사> (7/5)

- ‘파키스탄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A.Q.칸 박사는 전화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가 지난 2000년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보안요원들의 감독하에 북한 항공기에 선적됐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칸 박사 또 파키스탄군이 이 원심분리기 선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지난 199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당시 군 참모총장이었던 파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동의하에 보내졌음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 北 “6자 의무이행 완결돼야 다음단계 논의”(7/4)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며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냉각탑을 폭발해버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상기시켰음.
- 그는 “원래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없이 검증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혀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차 피력했음.

● 美, 영변핵시설 폐기비용 1천950만달러 배정(7/4)

- 손 매크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폐기비용 지원과 관련, “국무부의 비확산 및 군축기금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기금 가운데 2천만달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1천950만달러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매크맥 대변인은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12개의 조치 가운데 9개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음.
-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발·해체하는 것



과 관련, 관련비용 25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음.

● 中 “6자회담 일정 아직 미정”(7/3)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회담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음. 류 대변인은 “우리는 각 당사국들간에 합의가 이뤄져 구체적인 일정이 조속히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메드베데프, 북핵사태 ‘진일보’ 평가(7/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내주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마련된 회원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핵사태와 관련,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체계를 신설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또 영변 냉각탑 폭파를 언급, “북한 지도부가 취한 조치를 포함해 최근에 이뤄진 결정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부시 “北 핵신고 내용 아직은 회의적”<NHK 인터뷰>(7/3)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 개발계획 신고와 관련, 북한이 신고내용을 검증하는데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NHK 방송이 3일 보도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NHK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신고와 냉각탑 폭파를 환영하면서 “그러나 본인은 아직 회의적이다. ‘증명으로 보여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 7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NHK와 인터뷰를 가진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답은 그렇지 않다. 6자회담은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6자회담을 통해 납치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매코맥 “北, UEP·확산관련 신고도 검증가능”(7/3)

- 손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내용과 관련,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확산문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can be verified)’ 신고를 했다고 밝혔음.
-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신고서에 플루토늄 추출량만 적시하고 UEP 및 확산과 관련해서는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세 가지를 모두 신고했으며, UEP 및 확산과 관련한 신고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음.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는 검증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고서는 검증될 것이며, 만일 북한이 말해온 것과 그들이 제출한 것에 차이가 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와 반향이 6자회담 내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WP “北핵신고 45일 내 검증 완료 난망”(7/3)

- 워싱턴 포스트(WP)는 북한 핵신고 검증작업 과정에서 북한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미국 관리들은 시사했다고 보도
- 포스트는 북한이 지난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우라늄 농축활동과 시리아에 대한 핵기술 지원 등 핵확산 활동을 미국 측에 비공개로 시인하는데 그쳤으며 워싱턴 일각에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北플루토늄 확보·외부반출이 최종목표”<힐차관보>(7/2)

-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최근 영변의 냉각탑 폭파에 대해 ‘매우 훌륭한 신호(a very good sign)’이며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플루토늄을 확보, 외부로 반출하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북한에 플루토늄이 남아 있다면 비핵화된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북한 플루토늄을 외부로 반출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신고한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6자회담 일정 아직 통보 못받아”<힐 차관보>(7/2)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 소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6자회담 최신내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6자 수석대표회담 일정과 관련, “중국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그는 “검증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검증을 추진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음.

● 美 관리 “6자회담 재개 9일이나 10일 가능”(7/1)

-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현재 계획은 다음주 중반”이라며 “변동이 있을 수 있고 6자회담의 의장국이 중국이 발표하겠지만 차기 회의는 오는 9일이나 10일에 가능하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는 7일 베



이징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 **라이스, 북핵문제 “앞으로 갈 길 멀다”(6/30)**

- 중국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모두 고무됐지만 앞으로가 더 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6자회담 일정에 대해 “매우 빠른 시간내에 재개될 것”이라면서 “수주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독립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도덕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며 폭력을 거부하고 문화와 종교, 역사 방면의 자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는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북핵 협상, 핵무기 문제로 더 어려워질 것” <WSJ>(6/30)**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핵협상은 이제 평양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전략도 핵무기가 대화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테러지원국 해제 수용 전망” <RFA>(7/4)**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하원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적다(very unlikely)”고 미 의회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망.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지난달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가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6420)’을 제출했음.

● **北 포스터·도자기 뉴욕 전시(7/3)**

- 북한 당국의 체제 선전 구호를 담은 포스터가 미국 뉴욕에서 전시됨. 미 경제 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영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헤더는 개인적으로 모아온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그림, 도자기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이번 여름 열 예정. 이들 수집품 중 대부분은 헤더가 펴낸 283쪽 분량의 책 ‘북한 포스터’에도 실렸음.
- 전시되는 포스터에는 ‘쌀풍년 남새풍년 과일풍년 고기풍년으로 맞이하자’, ‘염소 기르기를 통이 크게 벌리자’ 같이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것과 ‘끝까지 지키자 혁명의 붉은기를’, ‘잊지말라 승냥이 미제를’, ‘민족공조로 미제의 파렴치한 흥계를 짓부시자’ 등 정치적인 것들도 있음.



- “北, 1인 하루 배급량 150g 불과” <美단체들 조사>(7/3)

 -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이 본래 1인당 하루 600g이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줄어들어 현재는 단지 150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5개 미국 구호단체는 지난달 4~20일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25개 군에서 식량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같이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전했다.

- “유엔 대북제재 지속될 것” <칼릴자드 美유엔대사>(7/3)

 - 잘마이 칼릴자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조치들은 북한이 결의내용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칼릴자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고립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추출한 플루토늄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농축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부시 “北·이란에 군사적 옵션 배제안해”(7/3)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외교적 해결방법을 우선시 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 부시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본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우선이 되어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은 (피랍자들의) 부모와 일본 국민,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틀”이라며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대북 식량지원 핵 협정과 무관” <USAID>(7/2)

 - 수만t의 미국 지원 식량을 북한에 배분했던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면서 고립된 나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접근의 자유를 누렸다고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AID) 존 브라우스 북한담당관이 2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새로운 개방은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이끈 지루한 정치적 협상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 **美하원의원, 北테러지원국 해제요건 강화법 추진(7/2)**

 -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주)은 지난 달 26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건을 법으로 규정한 가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6420)’을 제출했음.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신고서를 제출했음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일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WFP, 대북 지원 목표액 86% 모금”<RFA>(7/2)**

 - 그레고리 바로우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담당 공보관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올해 5월까지 전체 예산 약 1억1천800만 달러의 절반 정도만 모금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두달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대북 식량지원 약속이 잇따라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설명.
 -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이 유엔에 요청한 긴급구호 자금 1천400만 달러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90%(약 1천26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 **“한국말 구사자가 北식량분배 감시”<WFP>(7/2)**

 - 북한에서 식량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이 처음으로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직원을 통해 북한에서 식량분배를 감시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보도. 토니 밴버리 WFP 아시아국장의 말을 인용, 한국어 구사자를 통해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간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 **“北, 美와 교역정상화시 무역액 19배 확대”(7/1)**

 -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정상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외무역액이 지난해 29억 달러의 19배인 551억달러(약 58조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연구원은 4단계에 걸쳐 미국과의 무역정상화를 진행한 베트남의 사례를 기준으로 이같이 추산했음.

- **“美식량, 남포·홍남·청진으로 분산 입항”<WFP>(7/1)**

 -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1차분인 밀 3만7천가운데 1만8천t은 서해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나머지는 동해의 함경남도 홍남항과 함경북도 청진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 미국의 구호단체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자강도와 평안북도 농촌 지역의 학교와 병원에 10만톤의 식량을 분배할 계획이라고 WFP는 밝혔다.

● 부시, 북핵폐기 美예산지원법안 서명(7/1)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 서명식을 갖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을 확정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안은 지난 2006년 10월 대통령에게 법 발효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대북 ‘글렌 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북한의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법 발효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약속한 북핵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 “美,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실물로 보여줘” <조선신보>(6/30)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제재해제의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 조선(북한)의 ‘목적’을 해설하는 언론들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해놓고도 부시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했던 “그릇된 정책노선을 바로잡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번 조치의 “경제적 효과성은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경제제재가 일정하게 완화되는 이번 조치로 하여 조선의 대외 경제활동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WHO·FAO, 北 AI방역체제 구축 공동 추진<RFA>(6/30)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FAO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주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시 설명회가 열렸으며 “이번 공동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6개월동안 진행된다” 전했다.
- FAO 관계자는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지만 FAO와 WHO는 AI연구소에 대한 장비 지원과 농·축산업 및 공공위생 전문가들의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 50만 유로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北, 美·UN 등에 식량지원 접근확대 허용”<CNN>(6/30)
 - 북한이 핵신고와 냉각탑 폭파 이후 미국 및 유엔 등과 식량지원을 위한 대북접근 확대를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만8천t의 식량을 선적한 미국 선박이 북한 남포항에 29일 도착했다고 CNN방송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북한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식량지원을 위해 더 많은 북한지역을 개방하고 식량이 의도된 대로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음. 식량원조를 담당하는 해외요원들의 수도 1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북한은 50개군으로 제한했던 식량원조를 거의 모든 지역인 150개 군에 허용하기로 했음.

다. 중·북 관계

- 北어민 2명 해상표류 중 中공안에 구조(7/6)
 - 북한 어민 2명이 어선의 기관고장으로 폭풍우 속에서 해상을 표류하다 중국 공안에 무사히 구조됐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보도. 통신에 따르면 최성남씨 등 북한 어민 2명은 지난 4일 오후 디젤엔진이 달린 5m 길이의 목선을 타고 북한의 한 포구를 출발해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기관고장과 때마침 불어닥친 폭풍으로 약 60km를 표류한 끝에 5일 오후 단둥(丹東) 부근 해상에서 단둥변방지대 신거우(新溝)파출소 소속 순찰대원들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음.
 - 발견 당시 최씨 등이 탄 목선에는 통신설비는 물론 항법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단둥변방지대는 이들 어민을 상대로 표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고장난 목선의 엔진을 수리해주고 연료와 식량 등을 실어 북한으로 돌려보냈음.
- “시진핑, 訪北선물로 항공유5천t·1억위안 제공”(7/4)
 - 중국의 복수 대북소식통들은 “중국은 당정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무상원조 성격으로 선물을 제공하던 관례에 따라 지난달 17~19일 북한을 찾은 시 부주석의 방북 선물로 항공유 5천t과 1억위안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 부주석의 방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직 원조 규모와 시점,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中 “김정일 올림픽 참석 정보없다”(7/3)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대변인은 “각국 지도자의 개막식 참석 여부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발표하겠다”고 말해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음.



라. 일·북 관계

● 潘 총장, 日에 대북 식량지원 촉구(7/1)

-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긴 가뭄으로 인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6월 30일 나와 만난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은 일본이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 일본인 61% “대북제재 해제 반대”(6/30)

-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대북제재 해제에 반대했으며 제재 해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내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44%가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약 39%였음.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간 북한과 일본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음.

● “김정일 올림픽 방중 어려울 듯”<마이니치>(6/30)

- 북한 지도부가 8월8일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북한 측 대표로 국내 서열 4위인 김영일 내각 총리를 보내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조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

마. 기타

● “UNDP, 대북사업 재개 논의중”<VOA>(7/4)

- 유엔개발계획(UNDP)이 사업자금 전용 논란으로 지난해 3월 중단했던 북한내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4일 UNDP의 데이비드 모리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 모리슨 대변인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DP 집행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이 대북 사업자금에 관한 불법행위 의혹들이 해소됐다는 보고를 받고 UNDP의 대북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 북한이 UNDP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 헝가리의 미클로스 네메스 전 총리가 이끄는 외부조사단이 조사를 벌인 결과 UNDP가 북한의 자금전용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UNDP측은 불법행위 의혹이 모



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대변인은 대북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활동을 재개한다면 이사회가 인력 채용과 현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UNDP는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제복송중지 자전거일주단 브뤼셀着 활동 시작(7/2)

-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소속 회원 등 70 여명은 브뤼셀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없이 올림픽도 없다”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 행사단은 이날 행사를 마친 후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발했으며, 암스테르담, 헤르토겐쉬, 독일 쾰른,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파리,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 영국 런던에서 일주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

● UNDP내 대북사업 재개 여론 고조(7/2)

- 로이터가 입수한 UNDP 이사회 발언록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36개 UNDP 이사국 중 대다수는 대북 지원 사업 재개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UNDP는 아직 대북사업을 다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9월 열릴 UNDP 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부시, 한미FTA 조속 비준동의 의회에 거듭 촉구(7/4)

-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비준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미 의회에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를 빠른 시일내 비준동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음.
-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노동통계국(BLS)이 6월 신규 일자리 통계를 발표한 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성장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부시 8월 5~6일 한국 방문(7/2)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베이징(北京)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가는 길에 8월 5~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백악관



이 1일 밝혔음. 부시 대통령은 오는 5~9일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며, 이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테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말했음.

● 美, 부시답방 일정 일방공개에 사과(7/2)

- 미국 측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우리와의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2일 “미국 측이 오늘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오면서 사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한 일정이 공개된 점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음.
- 테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오는 7~9일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번 만남은 8월 5~6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답방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부시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공개했음.

● “美쇠고기협상 강요주장은 한국인과 정부 알보는 것” <미국무부>(7/1)

-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전문가들은 솔직히 말해 한국 국민과 정부를 우월감을 가지고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이익을 완전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케이지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전적으로 동등한 친구와 우방 그리고 파트너로서 협상을 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협상들이 이뤄졌고 분명히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역량을 존중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민들을 대표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 문제건 다른 문제건 한국인들과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또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있고 한국 소비자들도 스스로 이 상품들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않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美상원의원, 한미FTA 대선후 표결 시사(7/1)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 한미FTA 심의를 담당할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스리 의원이 최근 한미 FTA가 11월 대선 이후 내년 1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
- 그래스리 의원은 지난 24일 지역구인 아이오와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 등을 언급, 쇠고기 문제가 해결



됐으니 이제 자동차 문제 등 한미 FTA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인터넷판이 30일 보도

● 미한FTA재계회의, 미 의회에 FTA 신속 비준동의 촉구(7/1)

- 미한FTA재계회의(이하 재계회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명 1주년인 30일 미 의회에 신속한 FTA 비준동의를 촉구했음.
- 한미FTA를 지지하는 미국 내 500여개 기업들로 구성된 재계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성장하고 중요한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한미FTA를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음.
- 재계회의는 “한국은 1조 달러 시장으로 미국의 7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FTA가 발효되면 3년 내에 소비자 제품과 공산품 가운데 95%의 관세가 면제되고 미국 농산물은 3분의 2가 즉각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음.
- 재계회의는 또 “FTA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서비스 수출 시장 확대와 더불어 규제 및 관세 개혁을 추진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며 “한국과의 협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의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접근과 보호장치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주도 태평양연안 최대군사훈련 림팩 실시(6/30)

- 미국을 비롯해 10개국이 참가하는 태평양 연안 최대 규모 군사훈련인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이 28일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시작됐다고 미군 당국이 29일 밝혔음. 미군의 주도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의 문무대왕함(4천500t급), 양만춘함(3천t급)을 비롯해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등 모두 10개국이 참가했으며 내달 31일 까지 개최.

나. 한·중 관계

● 潘총장 中 환대속 방중 마무리(7/3)

- 유엔 사무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반기문(潘基文)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의 환대 속에 중국과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2박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함. 반 총장은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개별 회동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중국과 유엔간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했음.
- 반 총장은 또 중국 외교학원에서의 특별 강연을 비롯해 올림픽 시설 참관, 에이즈(AIDS) 병원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음.



- 후진타오 주석은 반 총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유엔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의 모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

● **潘총장 내일 訪中…식량·기후문제 협의(6/3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달 1~3일 중국을 공식 방문. 반 총장은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 바오(溫家寶) 총리, 양제츠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갖고 식량위기, 지구온난화, 아프리카 개발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후진타오, 8월 27일께 한국 방문할듯(6/30)**

-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30일 “후 주석이 8월26일부터 이틀동안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참석을 마치고 8월 27일께 방한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후 주석이 올림픽이 끝나는 8월 24일 이후 방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G8 정상회의 7일 日 도야코서 개막(7/6)**

- 제34회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7일 개막.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등 현안들이 중점 논의되며 회의 마지막날인 9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의장 선언을 발표.
- 이번 정상회의는 7일 오후 G8 정상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정상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개막. 둘째 날인 8일에는 G8 정상들이 모여서 온난화 대책과 세계 경제, 아프리카 지원, 북핵문제 등 정치문제를 주제로 논의가 집중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테러 대책에 대한 특별 성명, 식량 수출 규제 자숙 요청 등을 담은 식량문제에 대한 특별 성명 등의 합의 문서가 채택될 전망
- 마지막날인 9일에는 G8 정상과 이명박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맘모한 싱 인도 총리 등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오민 가운데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M) 정상회의가 열림.

● **“日, 대마도 한국령 주장때 위기의식 느껴”(7/3)**

- 지난 1948년 이승만 당시 한국 대통령이 대마도(일본명 쓰시마)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NHK



방송이 3일 보도.

- 대마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과 1949년 한국령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대마도에 관한 다양한 문서를 담은 책자에 따르면 ‘국경 쓰시마의 방위와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극비문서에 “만약 유엔이 승인하면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등으로 언급돼 있는 등 외무성 담당자가 한국령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흔적이 있다고 NHK는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美상원의원들 “中환율자유화 법안’ 위해 협력할 것”(7/3)

- 미국의 중견 상원의원 4인방이 2일 중국 등 무역상대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상원 재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민주당 의원 2명과 공화당 의원 2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환율 관련) 목표와 관심사를 공유하므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미 행정부가 무역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교역국을 통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 2개를 각자 통과시켰으나 관할권 다툼 등으로 인해 추가 조치는 없었음.

● 美의원들, 中인권운동가 면담 무산에 분개(7/2)

-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프랭크 울프 의원은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중국 변호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들어볼 계획이었으나 중국 공안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반정부 인사들을 붙잡아 가택연금을 시키는 바람에 무산됐음.
-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미국 의원들은 “중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중국에 와서 보니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스미스 의원은 “비극인 것은 올림픽이 오히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이들은 중국 교도소에 수감된 정치범 734명의 명단을 리자오싱(李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석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음.

● **라이스, 후진타오·원자바오와 면담(6/30)**

- 중국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중국이 쓰촨성(四川) 대지진 피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복구하기를 바란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음. 라이스 장관은 지진 피해에 대처하는 중국 지도부와 중국인들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미국은 중국의 지진 피해 복구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음.

마. 미·일 관계

● **부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외면 안해”(7/6)**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밝혔음.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열리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의 윈저호텔에서 후쿠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재개될 6자 수석대표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로 일본인 납치문제가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일본측의 우려에 대해 “납치문제를 결코 잊지않겠다.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한다.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며, 일본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에서 해방되려면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납치문제다”며 6자회담과 북미 양자 협의를 통해 북한에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표명했음.

바. 미·러 관계

● **“美 대선, 미-러 관계 영향 없어야”<러 외교보좌관>(7/6)**

- 러시아는 올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양국 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6일 러시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
-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러시아 대통령 외교 보좌관은 “러시아 대선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대선 등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 국제 무대에서의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연 또는 중지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사. 중·일 관계

● 후진타오, 7일 방일...G8 정상회담 참석(7/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일부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초청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에 G8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역외국 정상들을 초청했음.

● 中, 日의원단 дя오위타이 항공시찰에 항의(7/1)

- 외교부 아주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베이징주재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의 дя오위타이 시찰에 편리를 제공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아주국 관계자는 дя오위타오는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에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음. 일본 야당인 민주당 소속인 이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의원을 비롯한 수 명의 의원들은 30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дя오위타오 상공을 시찰했음.

아. 기타

● 사르코지 “中-티베트 대화 진전시 올림픽 개막식 참가”(7/1)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30일 중국과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회담이 더 많은 진전을 이룬다면 오는 8월8일로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음. 티베트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행사 불참을 시사해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에 출연, 양측 간 회담이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 재개된 회담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면 자신의 개막식 행사 참가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